

27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755.11 (-1.98)	911.25 (-4.84)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3.288 (-0.013)	1348.70 (+9.20)



기아 광명 EVO 플랜트를 둘러보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재계, 초격차 확보 속도 낸다

정의선 “사람이 미래” 8만명 채용 68조 투자

현대차그룹, 3년간 고용·투자계획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 확대 집중 GBC 인허가면 9200명 신규고용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서울을 상징하는 대형 랜드마크 및 미래사업 테스트베드로 조성중인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채용도 예고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50층대 타워 2개동과 저층 4개동 등 총 6개동으로 하는 GBC 설계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다.

인허가 절차가 속도를 내면 투자와 고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시행정학회는 GBC 프로젝트에 대해 ▲생산 유발 효과 265조원 ▲고용유발 효과 122만명 ▲세수증가 1조5000억원 등의 경제효과를 추산한 바 있다. 통상적인 인허가 기간을 감안해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 중 설계 변경안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면 건설 본격화로 GBC 프로젝트에서만 2026년까지 약 4조6000억원 투자 및 9200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진다. 2030년까지는 총 19조5000억원 투자, 누적 기준 5만6000명가량의 고용이 창출된다.

현대차그룹 차원의 장기적 고용·투자 계획 발표는 이례적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의 대규모 고용 창출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다양한 신사업은 물론 기존 핵심사업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으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주요 그룹사 주가가 역대 최고가에 근접한 상황에서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현대차그룹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청사진 제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여야, 민생·경제·미래공약 대결 본격화

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 확성장치·SNS 등 통해 지지 호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25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46명의 비례대표 의원에게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미래’를 이끌어 가야 하는 중책이 맡겨질 예정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6면〉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 붙이고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펼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장비는 소리 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주 앞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력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 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인 4월 10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

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 등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비사각지대 용적률·층수 등 규제 푼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원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수익성 개선 공공기여 부담 15%서 10%로 낮춰

서울시가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도로 접도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공공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개발 이익이 적은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리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게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고, 허용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예컨대 ‘기준 용적률 210%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서울시 중구 시청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허용 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2)로 넣으면, 허용 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분양 275%·임대 25%→분양 285%·임대 15%) 증가해 사업성이 높아진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강남을 제외한 재건축 지역 대부분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곳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지하철 승강장으로부터 약 3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은 전락용도시설(임대주택·노인복지시설·공원 등)을 설치하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일률적으로 역세권이면 준주거지역으로 다 종 상향을 해준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도시계획 위계를 고려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밀단지의 현황용적률(현재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용적률)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2004년 중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조성된 현행 조례나 허용 용적률을 초과,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의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면에 계속) /김현정 기자 hjk1@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필수의료회계 신설 등 과감히 투자... 의대정원 배정은 완료”
▲ 의협 비대위 “尹, 전공의 만나 협의하길” /사진 뉴스1

▲ 윤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과도할 정도로 빨리 집행” 지시
▲ “비례 돌풍” 조국당 호남 지지 어디까지



▲ 한동훈, 가락시장서 4·10 총선 출정식... 물가동향 점검 /사진 뉴스1
▲ 이재명, 충주·청주 등 충북 지원 유세... 野비례정당과 합동 선대위 회의도